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교육부지 수용' 논란

송암공원 부지에 광주대 교지 5만1639㎡ 포함 대학 측 '대체 부지 확보 등 대안 마련' 요구 광주시 "향후 사업시행사와 논의해야할 문제"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부지(교지)가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 4개 공원에 대한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4개 업체

를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마북, 송암, 수암, 봉산 공원이며, 시는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접근성 등 기준을 근거로 세부 협상을 벌인 뒤 2019년 중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제 수용되는 송암공원 사업부지에 광주대학교 교지가 포함

되면서 대학 측이 반발하고 있다.

송암공원 사업면적은 52만4927㎡로 이 중 10% 가량이 해당하는 5만1639㎡가 광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심학원의 교지다.

교지가 강제 수용되면 광주대의 교지 확보 비율이 교육부 기준 면적을 밑돌아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지 확보율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한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교육부에서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현재 광주대의 교지는 25만1941㎡로 확보율 기준 대비 115.6%이지만 광주시 특례사업에 강제 수용되면 91.9%로 낮아진다.

대학 교지를 처분하는 것은 교육부의 승인사항이다. 교육부는 교지를 처분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체

용지 확보를 위한 일정과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대는 지난해부터 광주시에 사업부지 수용 제외와 부지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른 대체 부지 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할 문제라며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광주대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위

한 교지를 공원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수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며 "부득이하게 추진할 경우 대학 운영을 위한 교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대라고 해서 특별히 제척해 줄 문제가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정비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문중 땅이나 개인 사유지 등이 많은 데 대학이라고 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소유주들의 제척 신청이 쇄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세계수영대회대표단, 오늘 광주 방문

주경기장 설계·오픈워터 장소 등 논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수영연맹(FINA) 대표단이 광주를 찾아 주경기장 설계문제와 '수영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장소 결정 등 대회 준비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4일 '코넬 마르케스쿠 사무총장과 와킨푸를 시설위원장, 피터홀 마케팅TV 부장 등으로 구성된 FINA 대표단이 15~18일 3박4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FINA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하반기 방문 당시 FINA 측이 요구했던 남부대 주경기장의 인원과 선수 통보 등 동선과 인시관람석에 대한 피난 계획 등 주요 경기장의 설계 보완사항들을 협의·조율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또 지난 해 6월 방문 때 요구했던 대회 안전관리와 경기 참가선수 등에 대한 보험분야 예산의 증

액 여부, 방송 관련 실무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FINA 대표단은 오는 2월 1일 중국 충칭에서 열리는 'FINA 다이빙 컨퍼런스'에서 조직위가 FINA 세계대회 개최도시 자격으로 대회 준비 상황과 경기 프로그램 등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한 사전 조율 작업도 예정돼 있다.

시와 조직위는 FINA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FINA 대표단은 이번 일정동안 현장방문 없이 서류와 도면상으로만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시장은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광주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FINA 대표단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방문에서 주경기장 변경이나 대폭적인 설계 보완이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은 기자

'스마트 수산양식·와이파이' 전남도 정보화 마스터플랜 완성

전남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화 경향에 발맞춰 '도민이 행복한 지능사회 전남' 비전 달성을 위한 '제5차 전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전남도가 이날 발표한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정보화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정부 국정과제, 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과 연계해 행정·안전, 생활·복지, 농업·해양 등 7개 분야 33개 정보화 사업에 총 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 분야의 경우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 업무 환경 구축 등이고, 생활·복지 분야는 ICT 활용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 농업·해양 분야는 기후(기상) 기반의 어장 관측정보 관리시스템과 맞춤형 스마트 수산양식 플랫폼 기반 구축 등이며,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는 도민 누구나 고품질의 보편적인 정보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기·대중교통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등을 추진한다. /최효영 기자



30년 만에 만난 호돌이-수호랑 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2018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19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경찰에 안보수사처 신설 '대공수사' 맡긴다

靑, 권력기관 개편안...수사권 조정·안보수사처 설립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향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

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도 시도한다. 아울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

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시스

광주시민이 꿈은 우선 추진사업은 2면
광양향 배후단지 투자 유치 시동 4면
광주 분양 불법 현수막 몰살 13면

호남매일 창사 18주년

효사랑 연중 캠페인

효

행복·감사·봉사

사랑 실천

호남매일신문이 창사 18주년을 맞이하여 효와 불우이웃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며 노인 정신 건강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효사랑에 대한 의미와 인식을 재정립하고 효사랑이 곧 가족사랑 나라사랑임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효사랑 연중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주최 | 호남매일